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41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신○○
피 고 ○○시 ○○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피고가 2021. 10. 15.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는 'B 주식회사'로, 2018. 10.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7. 5. 31.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보육시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휴게음식점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6. 12.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 서비스 제공'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4. ○○○○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사회적기업 인증번호: C,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 제공형).¹⁾

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2018. 10. 31.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전대업을, 2019. 4. 15. 주택임대업, 주택 임대운영업을 각 추가하였다.

라. 원고는 ○○○○○○공사가 공모한 '19-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의 'D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에 지원하여 2019. 6. 10.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고, '19-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및 '19-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여 2019. 11. 5., 2020. 1. 22. 각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1. 1. 25. ○○시 E 내지 F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4동) 및 근린생활시설 1,833.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면서, 2021. 2. 18. 취득가액 3,019,979,4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4,559,410원, 지방교육세 4,831,940원, 농어촌특별세 1,244,480원 합계 90,635,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 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1호

1) 2018. 10. 31. 상호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9. 1. 8. 기관명 변경을 사유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았고, 2021. 4. 1. 본점이 이전됨에 따라 원고는 2021. 4. 27. 소재지 변경을 사유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1. 10. 8. 피고에게 취득세 등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0.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의 사회적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회적기업이 사업관리 주체 또는 공동의 사업관리 주체가 되어서 취약계층(저소득층,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보금자리(공공성이 강한 공공임대주택 등)를 제공하고 입주자들의 일자리(경비, 청소 등) 창출을 지원하여야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환급 불가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은 원고와 같은 사회적기업법상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사회적기업법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업으로서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사회적기업인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



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0조의 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제1항, 제2항 등과 달리 '직접 사용'의 의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의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유업무, 즉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전대업, 주택임대업, 주택 임대운영업이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업의 통상적인 방법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을 전제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규정은 문언상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상관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중 일자리 제공형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음에도 그 유형에 맞게 이 사건 건물을 취약계층에게 임대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는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문리적 의미를 벗어나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011. 12. 31. 신설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여건이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순기능적 역할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를 경감받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의 신설취지에도 부합한다.

3. 결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판사 주○○

 판사 남○○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 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끝.